

‘중국’ 세계 최대 규모 식량 생산국 농업총생산 국내의 27배 쌀생산량 34배 높아

초기 채소류 축산부분도 안심할 수 없어
SG(Safeguard Measures)설정 적극적 양허 제외
위해 노력해야

한중 양국 통상장관은 지난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 했다. 이명박 대통령 등 양국 정상이 지난 1월 협상 개시를 위한 국내절차 준비를 합의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설마했던 농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의 FTA로 입게 될 피해를 뛰어 넘는 농업피해가 있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은 협상개시 다음날인 5월 3일 한중 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농정포커스 17호를 긴급 발행 중국농업과 중국이 최근 맺은 FTA 협정 내용을 분석 FTA 협상에 어떻게 임해야 할지를 조언했다.

한중 민간이 2005년부터 공동연구로 시작된 한중 FTA가 2010년 산과학공동연구를 완료하고 2012년 1월 양국 정상의 공식협상 개시를 검토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4개월여 만에 양국은 국내 절차를 끝마치고 2012년 5월 2일 한중 FTA 협상 개시를 공식선언했다.

중국 농업은 2000년대 들어 연평균 12% 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2010년 현재 농업생산액이 우리나라의 30배에 이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인접

한 데다 기후대가 다양하고 농지가 광활하며, 인건비가 낮아 가격경쟁력에서 절대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비록 2004년 이후 농산물 수입액이 수출액을 초과하여 순수입국으로 전환됐지만 대두 등을 제외한 농산물, 특히 채소와 과실, 특작류 등 노동집약적 품목의 수출경쟁력은 여전히 막강한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식량생산 국가로 농경지면적은 2010년 기준 1억 1100만ha로 농가 호당 경지면적 0.47ha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식량생산은 세계 최대 규모로 2010년 쌀 생산량은 1억 9580만 톤이며, 소맥은 1억 1520만 톤, 옥수수는 1억 7720만 톤, 대두는 1510만 톤을 생산했다.

중국의 농업 GDP는 2010년 6.93조 위안으로 우리 돈으로 약 1178조원이며 농업의 GDP 비중은 2000년 25.1%에서 2010년 18.5%로 감소하는 추세다.

중국의 농업생산액은 201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약 27배, 농림어업 GDP 비중은 우리나라의 8배, 농가 호당 경지면적은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이며 중국의 쌀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약 34배에 이른다.

중국은 다른 나라와 체결한 모든 FTA 협정에서 민감품목을 설정하고 양허제외하고 있다.

칠레 및 뉴질랜드와는 각각 50개, ASEAN과는

고민감품목 34개와 일반품목 44개를 사실상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들 품목에는 주로 식량안보와 관련된 곡물류와 곡분류, 동식물성 유지류, 당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주로 활용하고 있는 비관세 무역장벽 중 하나인 동식물 검역문제의 경우 지역 조건의 적응(Adaption to Regional Conditions)을 명시해 중국 내 특정 지역이 동식물 질병 미발생지역으로 인정될 경우 검역상 수입규제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한중 FTA가 체결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채소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과실산업과 축산업 생산도 줄어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현재 중국이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하는 품목들도 한국 내 수요만 있다면 언제든지 생산해 수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우리 농업에 위협적인 요소로 분석됐다.

한중 FTA는 농가소득에 중요한 민감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능한 분야부터 양허하는 '낮은 수준의 FTA'로 출발해야 하며, '중간심사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이행기간 경과 후 영향을 평가해 후속이행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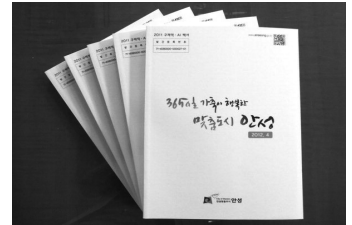
또한 농산물특별SG 설정 요구, 중국내 동식물 질병 관련 정보와 자료를 수집·축적함으로써 동식

물 검역 분야의 '지역조건 적용' 명시 및 그에 따른 특정 지역의 동식물 검역상 수입 규제 해제 요구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축유통신문 김재민 기자 jmkim@amnews.co.kr 2012.05.06

구제역·AI 위기를 전화위복으로 안성시, 종료 1주년 '365일 가족이...' 백서 발간

안성시가 구제역·AI(신종인플루엔자) 종료 1주년을 맞아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피해 현황과



개선대책 등을 담은 '365일 가족이 행복한 맞춤형 도시 안성' 백서(사진)를 발간했다.

시는 2011년 1월 6일 일죽면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고병원성 AI까지 추가 발생하자 관내 소·돼지 39만마리와 닭·오리 480만수를 살처분 매몰했으며 지난해 3월 30일자로 방역통제 조치를 해제한 바 있다.

이번 백서는 구제역·AI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추진현황, 안성시만의 색다른 노력(의심축 기동처리반 운영, 질병원인 자체분석, 고삼면 자율방역단 우수사례 등), 문제점 및 개선대책 등의 내용으로, 일반적인 사항보다는 향후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가족방역 개선 대안제시 위주로 구성됐다.

특히 축산농가와 군부대, 소방서, 자원봉사자, 공무원 등 21편의 다양한 체험수기를 수록해 당시 상황을 소개했다.

황은성 시장은 발간사에서 “구제역·AI 위기를 축산업 혁신위기로 바꿀 수 있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안성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간된 백서는 전국 시·군·구, 방역기관 등에 배부해 향후 타 지자체 및 관련기관에서도 구제역·AI 방역 추진에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경인일보 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2012.05.08

■ 환경부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

2년 유예 후 시행 추진...축분뇨 ‘공장폐수’ 수준 관리 강화
사육제한 지역 기준도 확대...업계 “축산업 말살 의도” 반발

지난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환경부가 이번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 대해 법개정과 함께 유예기간을 거쳐 폐쇄조치 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가축분뇨도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축산업계는 ‘축산업 말살 음모’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가축분뇨 관리제도 및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 곧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 대책을 통해 ‘가축사육제한 구역 지정’ 대상에 주거밀집 및 상수원지역외에 시·군별 환경부하, 그리고 농경지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 퇴·액비가 하천 등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해당 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 기준 가운데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이 가능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축사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 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제도까지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축사에 대해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 처분 및 폐쇄처분 조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정화처리가 아닌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나서 오는 2020년

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 폐지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키로 했다.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제도화, 오는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L21ho@chuksannews.co.kr 2012.05.07

전북도, 축산물 HACCP 컨설팅사업 확대

전북도가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관된 축산물 위생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해 HACCP 컨설팅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11억2000만원을 들여 2012년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정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업자 등 최대 사업량 140개소에 전문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고 5월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축종은 한우 81농가, 젓소 6농가, 돼지 25농가, 양계 17농가, 오리 6농가 등 135농가이며 축산물작업장은 식육판매업 2개소, 식육포장처리업 2개소, 축산물가공업1개소 등 모두 5개소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식품부에 컨설팅업체로 등록한 전국 28개 컨설팅업체 중에서 본인의 업종에 맞는 컨설팅업체를 선정·계약 체결해 컨설팅을 받으면 농가에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을 통해 축산물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을 강화해 소비자가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안전 축산물을 공

급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기자 yangmc@agrinet.co.kr 2012.05.10

축산, 생명산업 관점에서 이해…규제 아닌 지원 강화에 초점

지상공청/ 환경부 축산규제 강화…축산업계 여론



이상락 교수, 윤철수 조합장, 유완식 지회장, 김태섭 부회장, 이병규 부회장, 이재식 지부장, 이홍재 위원장, 정기현 지회장

환경부는 최근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 했다. 환경부는 이를 포함,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폐쇄조치하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및 선진화 종합 대책’을 마련,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에 이어 축산규제 강도를 높였다는 점에서 축산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축산규제와 관련한 축산인들의 의견을 지상공청으로 엮었다.

전세계가 ‘식량안보’ 열 올리는데 근시안적 잣대로 축산 ‘발목’

축산물 일정 지급률 유지 위해 열악한 생산기반 개선에 힘쓸 때

축분뇨는 유용한 자원…친환경 축산 가능토록 지도지원 바람직

▲이상락 교수(건국대·한국축산시설환경학회장)=축산은 생명산업으로서 반드시 존재되어야 할 산업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라도 축산식품을 일정량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환경부와 일부 지자체에서 축산이 혐오산업인 양 각종 규제로 일관하고 있어 안타깝다. 그렇지 않아도 FTA시대를 맞아 국내 축산인들은 수입축산물과 싸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축산농가에게 정부가 힘이 되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이 되어 주기는 커녕 발목을 잡기만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부가 그동안 지자체에 내려보냈던 사육규제 권고안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더욱 규제를 강화시킨 법을 만드려 하고 있다.

물론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여 농촌의 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지나친 규제로 축산이 설 땅이 없게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규제로 밀어부칠 게 아니라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는 큰 틀 위에서 친환경 축산이 가능하도록 지도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우리나라에 축산이 필요없는 산업이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으면 축산을 죽이는 정책이 아니라 축산을 살리는 정책을 펴야 한다.

▲윤철수 조합장(양평축협)=경기도 양평의 경우 팔당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축사평수를 규제 받고 있다. 그동안 가축 사육두수가 제한받아온 것이다. 그러다 보니 소규모 축산농가가

대부분이다. 농장을 늘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한다. 축산업을 전부 말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축산업은 농촌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는 산업임이 분명하다. 국민의 식량산업으로서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산업이 틀림없다. 또 축산농가는 물론 범 축산업계는 그동안 환경문제에 대해 각별히 신경 쓰며, 깨끗한 축사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공을 들여왔다.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의 경우 환경부와 같은 중앙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의 정책사업이기도 하다. 환경부가 축산업을 규제를 강화해 이 땅에서 축산업을 할 수 없도록 하려면 별도로 전국의 축산인들의 생존 대책을 마련해 줘야 한다. 축산업은 가축을 생산하는 산업으로만 보면 안 된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산업 전체를 봐야 한다. 환경부는 축산업이 국민의 생명산업이라는 관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 무작정 조이면 축산인들은 생존권 차원에서라도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다.

▲유완식 지회장(전국한우협회경기도지회)=정부의 축산에 대한 시각을 이해할 수 없다. 축산은 축산인의 삶의 터전이고 생명줄이다. 정부가 축산에 대한 규제 일변도로 나아간다면 축산인들은 갈 곳이 없다.

문제는 축산기반의 붕괴가 축산인이 갈 곳이 없는 것 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다. 국내 축산기반이 일정수준 갖춰져 있어야만 축산물을 수입하더라도 안전한 축산물을 골라서 수입해 먹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국내 축산기반이 없다면 안전에 의심이 가는 축산물도 쉽게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가 축산을 규제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환경 친화적인 축산기반을 튼튼하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다. 선진화된 국가를 위해서도 규제일변도의 정책은 곤란하다.

▲김태섭 부회장(한국낙농육우협회)=환경보호를 위해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결국 축산업을 말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이를 통해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목장을 그만두라는 소리다.

안그래도 FTA나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가만있어도 축산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한테 독약을 주는 꼴이다.

목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젓소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과거 아무시설도 없을 당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비가림 시설을 설치했다.

목장들 대부분이 비가림 시설 등이 무허가, 미신고 시설로 돼 있는 실정이다. 이들 시설을 폐쇄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는 자명한 일이다.

▲이병규 부회장(대한한돈협회)=그저 황당할 따름이다. 국민들에게 단백질 식량을 공급하는 우리 축산업이 왜 이렇게 내몰려야 하는가. 축산농가들이 법을 준수치 않으려는 것도 아니고, 일부 미진한 부분도 없진 않지만 그동안 자원화를 위해 나름대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고 자부한다. 도대체 얼마나 환경을 오염시켰길래 공장폐수와 같이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FTA체결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부 대책이 바로 이런 것이었나. 더구나 축산농가들이 당장 문을 닫을수도 있는 법을 만들면서도 이해당사자인 축산농가들의 의견수렴은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 축산농가들도 엄연히 세금을 내는 국민의 일원임을 감안하면 있을수 없는 일이다. 관련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와 협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혹여 현 정부에서 의욕을 가지고 추진해온 사대강 수질오염의 원인을 축산업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아닌가. 그 숨은 배경이 밝혀져야 한다.

▲이재식 지부장(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농촌을, 축산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규제일변도의 탁상행정이다. 축산업에 대한 현 정부의 시각이 어떤지를 짐작케 한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국가 전체적인 환경문제를 고려치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가축분뇨가 '공장폐수' 라는 게 말이 되는가. 또 무허가 미신고 축사의 폐쇄라니, 한마디로 축산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다. 규제에 앞서 현실을 직시하고 축산업이 생존할수 있는 대안과 여건부터 마련돼야 옳다.

생활폐수나 각종 공장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통해 처리하면서 가축분뇨는 왜 안되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민들의 먹거리이자, 식량산업을 이렇듯 도외시한다는 것은 수입으로 대체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축산물자급률은 어떻게 해서든 유지되어야 한다.

▲이홍재 위원장(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 당장 축산분야만 봐도 무허가·미신고축사가 최소 30%는 넘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축사신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법개정 후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무조건 폐쇄시킨다는 환경부 방침대로 라면 국내 축산물 자급률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세계가 식량자급률 사수를 위해 부심하고 있는 이 때, 우리 정부는 자급률을 떨어뜨리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말이 되는가. 더구나 한번 떨어진 자급률은 회복하기도 어렵다.

가축분뇨 관리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이번 환경부 대책의 주요 골자는 '축산업 규제'다. 특히 가축분뇨는 축산을 하다보면 부차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만큼 환경부가 아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제시해야 될 내용이다.

그런데 환경의 잣대로만 접근하는 정부 부처에서 일방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현 정부에게 축산업은 없는 듯 하다.

환경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식단을 책임지고 있는 축산업을 고사시킨다는 것

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환경만 고려해 모든 공장 과 자동차가 사라져야 한다는 논리와 같다. 가용 국토가 좁은 현실을 인정하고 환경에 대한 축산업의 영향을 최소화 할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다.

▲정기현 지회장(한국오리협회 충북도지회)=이제 걸음마 단계로 성장단계에 있는 오리업계 입장에서는 자라나는 새싹을 짓 밟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

오리산업은 축산업 중에서도 가장 늦게 발달했으며 이제 막 산업으로써 자리매김하고 있는 실정 이다.

때문에 오리농가들은 아직도 영세하고 낙후된 축사 시설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다. 그런데 가축분뇨 관리 강화를 위해 무허가, 미신고 축사를 폐쇄한다는 것은 오리 사육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로이다.

열악한 시설에서 조금씩 규모를 늘려가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무허가 축사에서 오리를 키우고 있는 농가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다.

이러한 농가들에게 오리사육을 포기하라는 것은 생계를 포기하라는 것이다. 이번 환경부의 조치는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신문 2012.05.09

독극물 먹어도 OK! 해독 성분 듬뿍 든 고기는?

‘착한 지방’ 듬뿍, 오리고기 … 혈관 젊게 한대요



오리고기는 유일한 알칼리성 고기로, 몸의 산성화를 막는다. 불포화지방산과 비타민 A가 풍부한 유일한 고기다.

요즘처럼 고기가 ‘죄인’이 된 시절은 없었다. 웰빙 열풍을 넘어 거세진 채식 열풍 때문일까. 고기를 즐겨 먹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건강을 포기했거나, 뭘 잘 모르는 사람 취급받기 일쑤다. 고기에 든 포화지방산과 중성지방, 그리고 고칼로리라는 등식이 고기를 멀리하게 된 이유다. 하지만 예외는 있다. 바로 오리고기다. 문제점으로 지목된 포화지방이 극히 적고, 식물에 풍부한 불포화지방이 오히려 더 많다. 유일한 알칼리성 고기라는 점도 특이하다. 한국식품연구원 김영봉 박사는 “오리만큼 건강에 이로운 고기는 없다. 영양학자들 사이에선 ‘신이 준 선물’에 비유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 70%

오리고기의 건강학적 특성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우리는 영양학자들 사이에서 그야말로 ‘연구 대상’이다. 신흥대 조리학과 최은정 교수는 “오리는 일반 고기와 영양학적 조성이 전혀 다르다”고 말했다. 첫째는 지방 조성이다. 일반적으로 소고기·닭고기·돼지고기에는 포화지방이 70%를

차지한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혈관에 때를 끼게 하는 혈관질환의 주범이다. 나머지는 중성지방(트랜스지방), 불포화지방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오리고기는 정 반대다.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70%를 이루고, 나머지가 포화지방이다. 중성지방은 아예 없다. 영양학적으로 볼 때 불포화지방산 섭취량이 포화지방산 섭취량보다 많을 때 혈관 건강에 이로운 것으로 보고돼 있다. 오리는 이런 영양학적인 균형을 잘 맞춘 최적의 식품이다. 두 번째는 알칼리성 식품이라는 것이다.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는 물론 모든 육류가 산성을 나타내는 것과 대비된다. 최은정 교수는 “채소나 과일을 제외한 모든 식품이 산성을 띄고 있다. 육류와 인스턴트 제품을 많이 섭취하는 현대인의 몸은 산성에 가깝게 변해 있다. 원래 몸은 중성일 때 가장 건강하다. 면역력도 좋고 세포의 활성도도 높다. 오리는 알칼리 성분이라서 다른 고기에 비해 몸을 덜 산성화시킨다”고 말했다.

독극물 먹어도 죽지 않아 … 고기에 해독 성분

오리고기는 익힌 후 에 얼음물에 바로 담그면 탄력 있고 쫄깃해서 씹는 질감이 훨씬 좋아진다.



세 번째는 독성물

질을 배출한다는 사실이다. 오리고기는 독극물을 먹어도 죽지 않는 유일한 동물이다. 예컨대 살충제 같은 독극물을 먹으면 사람을 비롯한 일반 동물은 소화기관부터 파열된다. 독극물이 온몸을 돌며 공격하다 결국 사망에 이른다. 하지만 오리는 다르다. 간에서 독극물을 해독해 몸에 좋은 물질로 바꿔놓는다. 이런 오리의 능력을 이용해 만들

어진 것이 ‘유황 오리’다. 최은정 교수는 “오리에 게 유황을 먹이면 간에서 황화합물로 변환시켜 몸에 저장한다”고 말했다. 이 황화합물이 든 오리고기는 소염·진통·면역력강화 등 인체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 또 오리 고기는 중금속과 노폐물을 해독하는 작용이 있다. 박경호한의원 박경호 원장은 “오리는 예부터 독소를 빼주는 약용식품으로 쓰여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건국대 동물유전공학과 송혁 교수는 오리의 해독능력에 대한 실험을 했다. 20대 남성 30명을 대상으로 30일간 하루 600g씩의 오리고기를 반찬으로 매일 먹도록 했다. 보통 돼지고기 1인분이 200g이니까 한 달 동안 매 끼니 오리 고기를 먹은 셈이다. 결과 혈액 속 독성물질인 요소 수치가 평균 19.7mg/dl에서 18.32mg/dl로 떨어졌다. 이는 통계학적으로 상당히 유의미한 수치다. 한편 고기를 매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체지방 등 성인병 관련 항목에 대한 수치는 변함이 없었다. 송 교수는 “요소는 고기류를 먹은 뒤 발생하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이 성분이 축적되면 각종 성인병에 걸린다. 그런데 오리 고기는 오히려 요소 수치를 훨씬 낮췄다. 구전으로 내려오던 오리의 해독능력이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피부미용에도 좋다. 최은정 교수는 “오리 기름의 불포화지방에는 피부를 탱탱하게 하는 리놀레산이, 단백질엔 콜라겐이 많이 들어 있다”고 말했다. 비타민 A함량도 상당히 높다. 오리고기의 비타민 A 함량은 소·닭의 12.3배, 돼지고기의 10배 정도다. 비타민 A는 여드름 치료제 유도체 성분으로 사용될 만큼 피부건강에 유익하다.

유황오리, 너무 자주 먹으면 위·간에 부담

하지만 이런 오리고기도 잘 먹는 법이 있다. 최은

정 교수는 “오리고기가 다른 고기류에 비해 영양학적 가치가 우수한 것은 맞지만 기름은 한 번 걸러내는 게 좋다”고 말했다. 오리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불포화지방산도 포화지방산과 똑같이 1g당 9kcal를 내기 때문이다. 물론 영양보충이 필요한 성장기 아동, 또는 원기회복이 필요한 환자나 노약자에게는 훌륭한 보양식이 된다. 하지만 비만이 염려되는 일반 사람은 가려 먹는 게 좋다. 기름에서 얻은 칼로리를 다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찌게 마련이다. 최 교수는 “오리구이를 할 때 기름이 흘러나오면 버리고 먹는다. 소량 포함된 포화지방산이 제거돼 불포화지방산 위주로 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요리를 할 때도 프라이팬에 한 번 볶아 기름을 뺀 다음 요리한다. 탕도 마찬가지다. 오리 백숙을 하면 다 끓을 때쯤 기름이 등등 뜨는 것이 보인다. 뜬 기름은 대부분 포화지방산이다. 송혁 교수는 “포화지방산 성분을 건져 내고 먹으면 유익한 성분만 가려 섭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황 오리도 무턱대고 먹지 않는다. 송 교수는 “유황이 몸에 해독작용을 하는 건 맞지만 자주 섭취하면 위·간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진짜 유황 오리는 한 달에 한번 이하로 먹는 게 좋다. 송 교수는 “일반 식당에서 파는 유황오리는 제대로 유황을 먹인 오리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진짜 유황을 먹인 오리는 고기에 유황 냄새가 확연하게 난다”고 말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진짜 유황오리를 기르는데, 한 마리당 5~6만을 호가한다. 유황을 먹인 오리 중 절반 가량만 식용으로 사용될 정도로 사육이 어렵다는 게 송 교수의 설명이다. 한편 오리고기를 고를 때는 선홍빛에 윤기가 나는 것을 고른다. 냄새도 나지 않는 게 정상이다. 한국 오리협회 이창호 회장은 “10여 년 전인 오리시장 개방 때부터 값싼 중국·대만산 수입 오리가 들어

오고 있다. 대부분 질기고 특유의 냄새가 나는 것들"이라며 "국내산 오리는 육질이 연하고 냄새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기름기를 빼고 맛과 향을 좋게 한 훈제 오리가 많이 팔리고 있다. 국내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포장지의 원산지 표기란을 확인한다.

오리고기 구매·보관법

- 오리고기 색은 선홍색에 가깝고 탄력이 있어야 한다.
- 지방 부위는 희고 탄력이 있는 게 좋다.
- 암적색을 띠는 것은 오래 보관된 고기, 푸른색을 띠면 이상이 있는 고기로 좋지 않다.
- 영하 2도에서 냉장 보관한다. 냉장고에선 2일 동안 보관 가능하며 진공포장일 경우 15일까지 보관할 수 있다.
- 냉동 오리는 영하 18도에서 얼린 고기로 냉동실에서 계속 보관해야 한다. 3~4시간 자연 해동 후 바로 요리해 먹는 게 좋다. 해동된 고기는 다시 얼리지 말고 냉장실에 보관한다.

Cooking Tip 오리로 만들어 먹는 다양한 요리

■ 마늘매실소스 오리스테이크



재료 : 오리고기 600g, 베이비채소 200g, 겨자 잎 30g, 밀간(양파즙 3큰술, 소금, 후춧가루 약간)마늘매실소스(매실청 3큰술, 간장·청주 2큰술, 마늘가루 1큰술, 통후추 굵게 빻은 것 약간)

1. 오리고기는 스테이크용으로 납작하고 두툼하게 잘라 기름기를 없애고 껍질은 벗긴다. 밑간에 오리고기를 재운다.
2. 뜨겁게 달군 그릴에 오리고기를 노릇하게 구우며 매실소스를 붓으로 발라 가며 익힌다.
3. 베이비채소와 겨자 잎을 곁들여 낸다. 후춧가루와 양파즙으로 오리고기의 비린 맛이 없어져 향긋하고 달콤한 일품요리가 완성된다.

■ 오리구이 무쌈



재료 : 훈제 오리고기 300g, 무 400g, 쪽파 10줄기, 붉은 고추 1개무초절임 양념(식초·설탕 4큰술씩, 소금 1/2큰술, 물 2컵)양념장(간장 2큰술, 참기름 1/2작은술, 고춧가루·깨소금 1큰술씩, 올리브고당 1작은술)

1. 훈제 오리고기는 종이 타월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한 후 그릴에서 하나씩 노릇하게 굽는다.
2. 무는 가로 8cm, 세로 4cm 크기로 얇게 슬라이스해 무 초절임 양념에 재운다.
3. 쪽파는 다듬어 3cm 길이로 썰고 붉은 고추는 반을 갈라 씨를 뺀 뒤 같은 길이로 곱게 채 썬다. 이들을 양념장에 무쳐 곁절이처럼 만든다.
4. 물기를 없앤 무 초절임을 한 장씩 깔고 구운 훈제 오리고기를 올려 말아 쪽파 무침을 곁들여 먹는다.

중앙일보 2012. 05. 14

가축 사육제한 조치시 청문회 가동 농식품부, 축산분야 6개법안 개정 추진...어떻게 바뀌나

자조금 미납 과태료 지자체서 관리
전국단위 수급조절 시행근거 마련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제 도입도

농림수산식품부는 FTA 시대가 본격 개막됨에 따라 시대 상황에 맞게 법개정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이 중 축산분야의 경우는 낙농진흥법 등 6개 법안을 개정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가 계획하고 있는 개정법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본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의무거출금 납부업무 수탁거부 및 중단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지방으로 이양하는 것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운영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축사육 제한조치 시 청문제도 도입한다. 또 가축거래 기록·보존 및 질병관리등급 부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한 것이다.

◆낙농진흥법

전국단위 수급조절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원유 검사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

◆초지법

조사료 증산시책 추진근거를 마련하고, 조사료 생산특구 지정제를 도입한다.

◆사료관리법

사료제조업의 등록 및 관련 사무를 지방하위 지자체로 이양한다.

◆소 및 쇠고기 이력에 관한 법률

법제명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한다. 이는 돼지·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ysteed@hanmail.net 2012.05.14

농협, 환경부 축분뇨 대책 강력 대응키로 현실 외면한 일방적 대책 규정... 비대위 구성 정책 재고 촉구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는 지난 5월 3일 환경부가 발표한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이 우리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대책이라고 판단하고 강력 대응 방침을 세워 주목된다.

농협은 가축사육제한구역 대상지역 확대 및 과밀지역 추가, 정화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존 850ppm에서 250ppm 강화, 농가가 생산한 퇴액비의 비료관리법 준수, 특히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강화와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의 신설이나 가축분뇨 관리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은 축산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정책이라는 입장이다.

농협축산경제는 이에 따라 일선축협 조합장들의 의견을 모아 환경부의 개정법안에 대해 공개토론회 및 전문가 회의를 잇달아 열어 축산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부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축산농가와 축산업 보호를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적극적인 농정활동을 통해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재고를 촉구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신문 신정훈 jw313@hanmail.net 2012.05.14

FTA를 막아내기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박정호 기자 2012.5.14

전남도, 축산농가에 차량·사람 통제·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당부

2012년 5월 16일 전라남도는 대규모 국제행사인 여수세계박람회가 개막함에 따라 내외국인 관람객들의 지역 방문이 급증하자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소독은 물론 차량 및 사람 통제를 강화해줄 것을 적극 당부하고 나섰다.

5월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구제역은 상시 예방접종으로 추가 발생이 없으며 고병원성 AI 역시 지난해 8월부터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인접한 국가 중 러시아·중국에서는 구제역이, 대만·베트남에서는 고병원성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자칫 차단방역을 소홀히 할 경우 재발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모든 농장 입구에 출입통제안 내판과 출입통제띠를 설치해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축사 및 축사 주변 소독은 물론 농장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은 반드시 입구에서 소독 후 진입토록 하고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100% 실시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농가에서는 가축 자연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농어민 단체, 한중 FTA 1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



민주통합당 김춘진 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한국농민연대가 5월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업 말살 시도, 한중FTA 1차 협상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중 농수산물 교역의 특징은 우리가 중국산을 일방적으로 수입하는 구조로 한국농어업의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하며 한중

적정 사육밀도를 준수하고 쾌적한 사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선제적 방역대책에 앞장설 것을 거듭 요청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과 AI 등 악성가축전염병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농가는 물론 도민들의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며 “매일 농장을 소독하고 외부인이나 차량 출입을 통제함은 물론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 의심축 발생 시 신속한 신고(전화 1588-4060)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전라남도청 2012.5.16

■ 한·중 FTA 협상운영세칙 확정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14일 북경에서 열린 한·중 FTA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운영 기본원칙 등이 담긴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다. 양측은 또 2개월 주기로 협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는 등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이에 정치권과 농어민단체들은 정부가 농어업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한·중 FTA를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 강력히 투쟁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차 협상 결과=양국 대표는 1차 협상에서 향후 협상운영의 기본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운영세칙을 확정했다. 세칙에는 협상의 원칙과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등 협상구조와 협상의 조직, 상품·서비스·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의 골격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

을 담고 있다.

양국은 또 양측 수석대표를 공동의장으로 하는 무역협상위원회(TNC) 구성에 합의했다. 동 위원회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및 무역규범 등 분야별 협상지침(modality)을 작성하고 협상 전반을 관장·조정하며 전체 협상을 이끌어 나간다.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양측은 대략 2개월 주기로 협상을 개최하기로 했고 2차 협상은 잠정적으로 7월 초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외교통상부는 1차 협상이 끝난 이후 대내적으로 협상지침의 초안 도출을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관계부처 및 관련 업계와의 의견수렴을 통해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 이에 따라 초민감품목, 민감품목, 일반품목에 대한 분류작업을 내부적으로 진행하면서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발하는 농업계=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은 한·중 FTA 협상에서 농어업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춘진 민주통합당 의원과 농수축산연합회, 한국농민연대가 14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춘진 의원은 “중국과 FTA를 추진하는 것은 우리 농업을 없애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한·중 FTA 추진을 우리 농어업의 말살로 규정하고 이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공동기자회견문에서 “김치, 고추, 마늘 등 주요 채소의 중국산 비중은 95%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한·중 FTA가 체결되면 우리 농어업의 미래는 더욱 불투명해지는 만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농민단체들의 바람과 달리 정부는 최대한 농어업을 초민감품목 또는 민감품목으로 분류한다는 입장일 뿐 농어업을 협상에서 제외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특히 이번 1차 협상에서 마련된 협상운영세칙 중 협상 원칙에서 포괄적 FTA 추진 등을 양국이 재확인했다. 중국이 FTA를 통해 농산물 수출을 기대하고 있는 만큼 농어업 제외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 관계자는 “농·수산물의 민감성이 높다고 판단해 가능한 양허제외, 장기간 철폐 등 농·수산물을 낮은 수준에서 협상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다만 협상에서 농·수산물을 완전히 제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 제외했던 쌀을 뺀 나머지 농·수산물은 한·중 FTA 협상 대상품목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조재호 농식품부 국제협력국장은 14일 브리핑에서 “과거 FTA 협상을 하면서 쌀은 한 번도 대상이 된 적이 없는 만큼 중국과도 이런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면서 “EU는 축산물에 강점이 있고 중국은 과일·채소가 많이 생산되는 만큼 민감품목의 우선 순위는 국가별 특성에 맞춰 다뤄야 한다”고 답변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현우 기자 조영규 기자 2012.05.17

| ‘한·중·일 FTA 특위’ 구성되나

민주통합당은 한·중·일 FTA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졸속 FTA 추진에 대응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농민단체들은 특위의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한·중 FTA 특위 구성에 대한 필요성도 주장했다.

▲한·중·일 FTA 특위=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5월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중·일 FTA 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정부, 시민단체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찬반의 의사도 듣고, 혹시 찬성했을 경우에 불리한 조건들을 제거시킬 수 있다”면서 한·중·일 FTA에 대해 국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자고 언급했다. 이는 FTA로 인해 농어업 분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과정을 거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야당은 그동안 FTA와 관련한 특위 구성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야당은 국회의 동의권한 이행, 국민의 알권리 보장, 이해당사자로부터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각 분야별 협상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의, 피해분야 지원대책 마련 및 입법 과제 검토 등을 위해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야당의 근거는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는 ‘헌법 제60조 제1항’과 ‘국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국회법 제44조’.

야당은 지난 한·EU FTA와 한·미 FTA 등 주요 FTA 추진과정에서 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제시한 바 있다. 2009년 6월 9일에 김종률 전 민주당 의원이 ‘한·EU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고 6월 23일에는 강기갑 통합진보당(경남 사천)의원이 또다시 같은 의안명으로 대표발의했다. 2011년 1월에는 현재 무소속인 박주선 당시 민주통합당(광주 동구)의원이 한·미 FTA 및 한·EU FTA 체결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지만 여당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처리되지 못했다.

▲농민단체 입장=농민단체들은 특위 구성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다만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이 강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한·중·일 FTA 특위가 선언적인 특위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며 “농어민단체 등과 함께 여야가 공동연구를 진행하면서 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등의 기능도 할 수 있도록 특위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한·중 FTA에 대한 특위 구성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중·일 FTA는 연내에 협상을 개시하기로 3국 정상에 합의만 했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없다. 그러나 한·중 FTA는 협상개시 선언 후 실무협상이 진행되고 있어 한·중 FTA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한·중·일 FTA 특위를 구성할 경우 한·중 FTA를 포함한 특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한·중·일 FTA는 그림조

차 그려지지 않아 실무협의를 꽤 해야 하는 만큼 국회에서 특위가 만들어져도 당장은 논의가 힘들 수 있다”며 “한·중 FTA가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볼 때 한·중·일 FTA는 한·중 FTA까지 포함한 특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계획=민주통합당은 특위 구성 이전에 19대 국회 개원 전까지 여야를 비롯해 농어민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국회 개원 후에는 이 협의체가 특위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를 위해서는 새누리당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통합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국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하려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입장에 따라 특위구성안이 결정될 것”이라며 “대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도 특위 구성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관계자는 “한·중·일 FTA의 중요성이 큰 만큼 국민의 여론 등을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2012. 05.21

어른들께 ‘농가 맛집’ 밥상 대접하세요
충북농기원, 농촌형 ‘농가 맛집’ 육성

충청북도농업기술원(원장 조광환)이 지역의 문



화와 향토음식을 연계해 농촌형 외식공간으로 육성하고 있는 ‘농가 맛집’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가 맛집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산채 등을 이용해 음식 솜씨 뛰어난 인적자원을 육성해 향토음식을 전승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충북 도내에서 농가 맛집으로 인기가 높은 곳을 소개한다.

단양 수리수리봉봉

신선이 산다는 선암계곡의 하선암, 중선암, 상선암의 계곡 길을 거슬러 올라 수리봉과 신선봉 사이 대강면 방곡리에 자리잡은 농가 맛집 수리수리봉봉을 찾아가면 자연에서 나는 두릅, 곰취, 취나무, 염두릅 등 갖가지 산나물 반찬에 감칠 맛 나는 오리한방백숙, 능이정식, 만두 등이 군침을 돌게 한다. 수리수리봉봉 농가 맛집을 가려면 미리 예약해야 한다.

괴산 얼음골 봄

감물면 백양리에 소재한 ‘얼음골 봄’은 박달산 골짜기 내에 있으며, 산야로 펼쳐진 맛 집 주변에는 지칭개와 산야초가 지천으로 나고 있어 지칭개 오리백숙과 산야초 비빔밥을 새로운 건강식으로 개발하고, 도토리묵 잡곡밥과 산야초 빈대떡을 특화해 인기 있는 메뉴중 하나다.

주변에 얼음골, 점토골, 느릅재, 박달산이 있으며,

최근 들어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산막이 옛길’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과 등산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각각의 농가 맛 집들은 독특한 메뉴와 함께 주변 문화유적 등 볼거리와도 인접하고 있으며 입소문을 타고 외국 손님들도 자주 찾는 곳이기도 하다. 충북농업기술원 연영흠 식품소득팀장은 “지역의 농특산물과 문화, 전통·향토음식이 어울려져 생산과 소비가 함께 촉진되고 상생하도록 본 사업 추진에 한층 더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유통신문 김지연 기자 kij@amnews.co.kr 2012.05.18

“무분별 가축 사육제한…식량난 부를 것”
전문가들 “지자체 경쟁적 규제 강화, 식량안보 위협” 지적

거리 제한 합리적 기준 설정·임야 축사부지 개발 등 제안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제정이 축산업의 축소로 이어져 가까운 장래에 식량난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축산업계에서는 지자체에서 가축사육 제한 거리를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어 앞으로 단백질 식량 공급에 막대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으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수년 사이에 자자체별로 민가로부터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거리를 100m에서 1천m까지 천차만별로 제정하고 있다.

특히 날이 갈수록 경쟁적으로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추세로 현재 사실상 축사신축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는 앞으로 우리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단백질 식량을 근본적으로 막는 심각한 사태로써 지자체의 안이한 자세가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축산법 등 상위법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일정한 기준과 조건 하에 가축사육을 허용함으로써 국민에게 단백질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축산전문가들은 축산법 등에서 축종별로 폐수 및 악취발생 정도에 대한 국내외 현장조사를 통해 폐수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전국적으로 합리적인 가축사육제한 거리에 대한 기준을 설정, 지속가능한 축산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또 축사부지난을 해소하기 위해 민가와 멀리 떨어진 임야에 축산부지를 개발하여 공급하는 대책도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ysfedd@hanmail.net 2012.05.21

“농가 금융컨설팅 무료 서비스 이용하세요”

농림수산식품부와 NH농협은행은 최근 자산 및 재무관리, 경영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면서 금융컨설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이러한 종합적 농업금융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NH농협은행이 농업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농업금융컨설팅은 농가의 자산, 부채, 농축산물 판매액, 투자비용 등을 분석해 경영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며, 경영진단 결과에 따른 최적의 자금을 지속적으로 연계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지속성장과 효율적 경영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이다.

희망 농가가 컨설팅을 신청하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농업금융컨설팅트들이 농가 현장을 직접 방문, 경영현황 및 재무분석을 통해 향후 3년간의 현금흐름과 손익분기점을 추정하여 효율적 농업경영과 자금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농업인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가까운 농·축협의 정책대부계를 찾아가 직접 신청하거나, 인터넷(consulting.nonghyup.com)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축산신문 김영란기자 ysfedd@hanmail.net 2012.05.21